

전남도, 세계 자연유산 '갯벌 지킴이 1조원 프로젝트'

2029년까지 9228억원 투입 생태계 복원 등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 4개 분야 29개 사업...1740명 고용 창출 기대

전남도가 오는 2029년까지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전남 갯벌'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9228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갯벌 보전·관리 및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시스템 구축, 갯벌 생태관광 활성화, 갯벌 우수성 확보와 협력 체계 마련 등의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최근 전남 갯벌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한 '전남도 갯벌 보전·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남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4개 분야 29개 사업 총사업비 9228억 원을 전남 갯벌 관련 사업에 쓰게 된다.

먼저 분야별로 갯벌 보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보성·순천 여자만과 신안·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갯벌생명관 건립, 해양생태계 서비스 직불제 등 10개 사업에 5840억원을 들여 체계적 보전·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한다.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체계 구축을 위해 7개 시·군 29개소에 1660억원 규모의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을 비롯해 5개 사업에 3055억원을 투입해 친한경 자연 퇴적화, 자연습지 생태 모델화 사업 등 갯벌 유형별 생태계 복원을 추진해 어업의 지속성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갯벌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남 갯벌 세계유산축전, 탐조관광, 생태마을 지정 등 6개 사업에 245억원을 들여 전남 갯벌의 해양생태적 가치와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갯벌 생태관광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갯벌 우수성 확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전남 갯벌 농·어업유산 등재, 한국 갯벌도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8개 사업에 88억원을 담아 전남 갯벌의 세계화 및 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전남도 갯벌 보전관리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지역 내 2조7216억원의 생산 효과와 약 174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2024년 한 해를 단위 사업별 행정절차와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 철저히 준비하는 기간으로 정했다.

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순천시, 보성군, 신안군 등 15개 연안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 해역별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갯벌 보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 갯벌을 세계적 갯벌 보전 관리의 모

범이 되도록 관련 기관의 협력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 갯벌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전남 갯벌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전남 갯벌의 가치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내도록 대한민국의 갯벌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7월 신안과 보성, 순천 등 전남의 갯벌이 포함된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전남도는 2022년 10월 해양수산부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위원을 신안에 유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중앙근린공원1지구 주민협의체'가 지난 31일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풍암호 호수의 수질을 3등급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시-주민협의체 합의안'을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풍암호 갈등 마무리...중앙공원 특례사업 '속도'

면적 유지·수질 3등급 개선...광주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광주시와 주민협의체 등이 1년 넘게 '원형 보전'과 '부분 매립' 등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광주 풍암호수 수질 개선 합의안이 지난 31일 주민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갈등이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 23일 광주시와 주민협의체 등은 호수 면적은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수심을 낮춰 수질을 3등급으로 개선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이는 광주시가 풍암호수 수질개선 방식과 관련,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설득해 최종 합의한 결과물이다.

이에 따라 풍암호수 원형보존 논란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원 조성사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며, 풍암호수가 명실상부한 광주 도심 속 '명품 호수공원'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중앙근린공원1지구 주

민협의체'는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풍암호수 수질개선에 대한 광주시와 주민협의체 합의안'에 대해 참석위원 22명 중 18명이 찬성해 최종 확정됐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풍암호수 바닥을 일부 성토한 뒤, 지하수를 비롯한 외부의 맑은 물을 유입하는 자연정화 방식을 사실상 수질개선안에 반영했다는 점이다.

특히 그동안 논쟁의 핵심이었던 담수량의 경우 현재 45만에서 15만으로 줄이게 된다. 수심 역시 현재 평균 6m 안팎의 수심을 1.5m로 줄이고, 호수 내 Y형 비점배제 배수막을 매설해 준공 기준 3급수의 수질을 상시 유지 관리하는 방식이다.

또한 ▲호수 주변에서 나오는 우수 유입 차단 ▲공원 내 수질상태 안내판 설치 ▲호수 외부경계 바닥재 호박돌 포설 및 호수 가운데 바닥재 모래·자갈 등 혼합 포설 ▲호수공원 인근에 2500평 이상

장미원 확대 이전 ▲호수 내 일부 데크길 설치 및 호수 주변산책로 6-10m 조성 ▲호수 경관조명 설치 등도 포함됐다.

광주시와 서구, 주민협의체, 민간공원추진사업자는 이 같은 결정 사항이 담긴 협정서에 서명하는 약정식을 11월 초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 어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원형보존에 대한 주민협의체의 요구로 갈등이 불거진 이후 약 1년 3개월 동안 강기정 시장 주재로 서구지역 전·현직 국회의원과 서구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풍암호수 수질 개선 사업 관련 설명회를 갖는 등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설득해가면서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번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고, 앞으로 공원조성 사업의 트랜드가 되고 있는 주민참여형 공원조성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작업 순조 전남도 민관협의회...임자·자은 12개 발전단지 조성 우선 추진키로

전남도는 지난 31일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제 1차 민·관협의회'를 열고 협의의 운영 사항 및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남도는 이날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23개 단지) 가운데 1단계 사업으로 임자·자은도 일대에 12개 발전단지(4.1GW) 조성을 우선 추진키로 하는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조안'을 마련해 민·관 협의회에 상정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 주도 입지 발굴·단지 배치 계획 ▲한전선 선(先) 투자 예정인 공동점속설비 등 전력공급 계획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등 지역 상생 방안 ▲지자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 수익 예상금 및 활용계획 등이다.

도는 3일부터 신문 공고, 전남도와 신안군 누리집 게시,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

친 뒤 최종안을 마련, 산자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집적화단지가 지정되면 해상풍력 발전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최대 0.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자체에 부여된다.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 수익은 계획된 단지가 조성 완료되는 시기인 2029년부터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발생되고, 연 최대 6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익금으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및 송전선로 경과지 주변 주민들에게 주민소득사업, 공공·복지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데 지역주민, 어업인 등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다음달 13일까지 예산안 심사도

전남도의회가 1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43일 간의 일정으로 제 376회 2차 정례회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도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7개 상임위원회를 통해 답없는 공공의료정책, 무안공항 활성화, WTO 개도국 지위 상실로 인한 농업 경쟁력 확보 방안, 지방보조금사업 성과 평가 결과, 향토산업 육성사업, 전남지역 주요 생산 작물의 가격 안정 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를 벌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도의회는 또 오는 15일 제 2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교육감의 2023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4년도 전남도 및 전남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이후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도 펼칠 예정이다.

도민 생활 안정과 불편 해소를 위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도 진행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광주 산수동·두암동 일대 장원교 방음터널 연장

홍기월 광주시의원 협의 성과

광주 동구 산수동 제2순환도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소음 피해 해결을 위해 방음터널이 연장 설치된다.

31일 홍기월(민주·동구1)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제2순환도로에 인접한 두암그린파크 구간의 장원교 방음터널을 최장 40m 길이로 연장 설치하는 공사가 내달 중순께 시작된다. 총 공사비는 14억 여 원이다.

두암그린파크는 1995년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 47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2000년 11월 제2순환도로 1단계가 준공되면서 도로 인접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2017년 방음터널을 10m 연장 시공했으나, 소음 문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고 도로변 주민들은 소음저감 대책으로 장원교 방음터널 재연장 설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광주시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절차상 어려움 등으로 난색을 표했다. 이런 가운데 홍 의원은 광주시와 제2순환도로(주) 등 관계



기관과 아파트 주민 간 민·관·정 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 차례의 현장 점검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지난해 10월 보건환경연구원의 소음 측정이 이뤄지면서 방음터널 연장의 필요성이 공식화됐다. 측정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변 기준(낮 65, 밤 55)을 웃도는 69~70소음(Leqdb(A))이 기록됐다. 이는 관리 기준 초과에 따른 방음터널 추가 설치 당위성의 근거로 작용했다.

이에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대수선, 운영설비 교체사업 계획에 이를 포함시켰고, 지난 24일 장원교 방음터널 시행을 위한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돼 내달 20일 전후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홍 의원은 "주민의 안정적 삶의 추구는 기본권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만큼 관계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안전하고 안정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2023 순천만 갈대축제

가만히 들어주기

2023. 11. 4 ~ 11. 5 순천만 갈대밭 여기저기

갈대 숲길에서 소리가 들려? 언플러그드 연주회
 그곳에 멍 때리기 명소가 있다! 거차마을의 초대
 우리소리 먹거리, 한바탕 잔치~ 유희마을 여행
 소원풀이 어영차 용졸다리기! 대대마을 사람들
 별배야 달려라 - 별량면 갯벌에서의 한판 승부
 설새탐조 여행 - 좌온에서 노닐까지 바람길
 줄줄이 말해요~ 순천포람~ 10년 후순천만!

● 참여 예약
<https://forms.gle/siE6daWPw5ufXybo7>
 010 2301 4885
 061 721 0900

2023순천만갈대축제 행사위원회